

CONSTRUCTION LAW
[건설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에 따른 변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에 따른 변화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개정 표준도급계약서는 단순한 양식 변경을 넘어 시공 리스크 분산과 하도급업체 보호, 자재비 급등 대응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핵심입니다. 검사비용 부담 조정, 공기 연장 사유 확대, 자재비 조정 요건 완화 등은 모두 건설사의 실무 부담을 줄이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완하도급 계약 간 정합성 확보, 계약 협상 프로세스 정비 등 실무적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계약 리스크 관리, 지금이 점검 시점입니다.

공공입찰 앞둔 건설사가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 리스크'

서울사·경기도가 건설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겸직 기술자·유령사무실 등으로 등록 기준을 형식적으로만 충족한 업체는 입찰 제한·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기술인력 요건, 자금·사무공간 실제성 등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사망사고 여전히 최고 수준, 영세건설사 대응 전략 있나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줄지 않았고 법적 책임은 오히려 소규모 건설사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떨어짐, 붕괴, 끼임 사고 등 반복적 사고는 사전 예방과 법적 요건 충족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현장 실효성과 입증 가능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최악의 건설 한파 속, 이제 안전은 선택이 아닌 '경영'입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행안내서 발표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작업 환경 변화가 잦고 자원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안내서'를 통해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평가의 이행 중심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위험요인 파악, 작업자 참여, 개선조치 기록 등은 모두 기업의 법적 책임과 직결됩니다.

CASE STUDY
판결분석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취소 요건 불충분 판결

책임준공확약 불이행에 따른 신탁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원청 대표 무죄·하청 유죄로 책임 분리 인정한 중대재해법 첫 판결

PROPOSED BILL
최신 시행·발의 법안

리콜 진행상황 보고 의무 완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공공기관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확대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GOVERNMENT TRENDS
관련 부처 동향

8월 30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기준 완화

건설폐기물법 위반 공표제 첫 시행, 과징금 2억원 처분도

INSIGHTS
언론 속 대륜

파이낸셜뉴스 외



법무법인 대륜, 다양한 인재로 '원 팀' 구성... '퀀텀 점프' 기대

대륜이 체계적인 전문가 영입 시스템과 그룹별 원 팀 전략을 통해 소송 경쟁력과 기업법무 대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뉴욕과 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서울경제



상법 개정 추진에 커지는 '사외이사 기근' 우려

올해 들어 코스닥 상장사 10개사 중 한 개사 꼴로 사외이사가 중도 퇴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는 상법 개정안이 사실화될 경우 벌어질 '사외이사 기근 현상'에 대해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방인태 변호사가 핵심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약업신문



리베이트 관련 규제 변천사 및 최신 규제 동향

최근 CSO 신고제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제약업계의 관심이 리베이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륜의 이일형 변호사가 리베이트 관련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최신 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조세일보 외



대륜, 고문으로 안일환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대륜이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고문으로 영입해 법률 서비스 경쟁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 고문은 국방부 계획예산관,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거쳐 2021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공공·재정 정책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CONTACT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 T. 070-7510-2014

고병준 경영대표변호사 T. 070-5221-2805

안권섭 대표변호사 T. 070-5221-3616

윤석주 최고총괄변호사 T. 070-7510-1044

박용두 최고총괄변호사 T. 070-7510-1820

손계준 총괄변호사 T. 070-5117-3709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표번호 1800-7905

법률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